

중증병상 끝내 입원하지 못하고 40대 중증장애인 ‘안타까운 죽음’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중증장애 여성이 방역당국의 획일적인 행정 절차에 병원 입원 치료도 제때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등졌다.

코로나에 확진된 중증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 매뉴얼 부재 속에 장애 여성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과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지 못하게 되면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 의료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광주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A(여·48)씨가 폐혈증으로 숨졌다.

‘척추성 근위축증’이라는 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함께 확진된 가족들보다 부쩍 상태가 악화됐다.

A씨 남편은 불안함에 14일 남구보건소에 연락해 “아내가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데, 식사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입원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남구보건소는 광주시에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1173명, 병상가동율은 49.3% 수준이었다. 전체 병상 가동율은 50% 미만이지만 중증병상의 경우 96.4%, 준중증병상은 89.8%에 이를 정도로 충분하지 못했다. 중증장애만으로는 중증병상, 준중증병상을 배정하기 어려웠고 비교적 여자가

코로나 심각한 증세 호소에도 병상 배정·치료제 처방 거절 당해 50세 규정에 치료 제대로 못받아 응급실서 치료 받던 중 숨 거뒀 체계적 의료대책 마련 시급 지적

있는 중증증병상의 경우 A씨 치료를 맡을 의료기관이 없어 입원조치가 불가능했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결국 A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께 상태가 악화되며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긴급히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가족들은 중증장애를 가졌음에도 자택에서 감기약을 먹는 수준의 재택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허술한 의료체계 때문이라며 분노했다.

A씨 지인은 “방역당국이 병상 입원 조치를 거절했고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요구도 거절했다”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았거나 약만 제 때 처방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됐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병상을 운영중이다. 심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더라도 집중관리군으로 관리될 수 없다는 얘기가. 이 때문에 방역당국이 장애인 확진자에 맞

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를 포함 3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 올 초 사회복지학을 수료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준비중이었다.

지인은 “집에 오면 엄마가 없는데 어떡하나. 아침에는 누가 깨워주느냐 라고 아빠에게 하소연하던 막내 아이를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민선 광주 장애인 가정상담소장은 “광주시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때마다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거짓말에 불과했다”며 “광주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A씨의 사망 이후 뒤늦게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장애 유무를 파악하고, 중증장애를 가진다면 일반 관리군이더라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해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광주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A씨의 죽음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에서는 당장 내일(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중증장애인 확진자 치료체계에 대한 건의서를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의 밑반찬 나누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광주상공회의소가 함께하는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이 23일 광주 북구 적십자 나눔터에서 열렸다. 봉사자들이 지역 1000여 가구 저소득아동청소년에게 전달할 반찬들을 옮겨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정동 붕괴 사고’ 안전 규정 위반 무려 93건 적발

광주고용청, 5일간 특별감독 실시
현대산업개발 15건·하청업체 78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DC현대산업개발측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붕괴사고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93건 중 25건은 사법조치를 하고 68건의 경우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재해발생보고 미 실시 등 현장 안전보건관리를 미흡하게 하는가 하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등 1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하청업체도 모두 78건이 적발됐는데, 안전보건

교육조차 시키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 위반 사항만 58건이 적발됐고 거푸집 지지대(동바리) 등 붕괴예방조치를 미흡하게 하거나 리프트 등 건설기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황중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으로 적발한 위반내용과 정도를 감안했을 때, HDC

경찰들의 거짓말...초과근무 앓고 수당만 챙겨

나주경찰 소속 29명 적발

경찰 20여명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도 거짓말해 수당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23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나주경찰서 A씨 등 28명과 근무시간 담당 행정관 B씨를 사기와 공전자 위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현대산업개발의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붕괴 참사’ 학동 재개발 공사 중지 조건부 해제 동구청, 새로운 철거업체 선정 등 제시...재개까지 시간 걸릴 듯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학동 4구역 재개발 구역 일부 철거건물에 대해 내려진 공사 중지명령이 조건부로 해제됐다.

23일 동구에 따르면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건축물 철거 공사가 진행중이던 건물의 철거 중지명령이 조건부로 해제됐다.

학동 재개발조합은 구속된 감리자를 대신해 지난 8일 새 감리자와 계약하며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동구청은 4가지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철거가 중단된 건물 34개 동에 대한 철거 재개를 승인했다.

구체적인 4가지 조건은 ▲새로운 철거 업체 선정 후 안전관련 회의 개최로 안전성 담보 ▲해체 감리

자의 해체 계획서·안전관리 계획서·안전 확보 계획 검토 결과 확인 ▲현장 배치된 건설 기술인 관리조직도, 도급 계약서·상주감리계약서·산재보험가입 증명서 확인 ▲해체공사 동영상 녹화 위치 선정 등이다.

하지만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4개 필지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장된 법원의 현장 보존 명령이 끝나야 하고, 특히 사업 구역 내 수용과 보상이 끝나지 않은 건물 8개 동에 대한 해체허가신청을 받아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된 곳은 철거가 진행되던 건물이지만, 실질적인 공사 재개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